

“AI 시대, 대학 혁명 없인 국가 미래 없다”... 고등교육 대전환 위한 ‘7대 과제’ 부상

✎ 백두산 기자 | ⌚ 승인 2026.01.09 08:59

김종영 교수 “서울대 10개로 병목사회 해체”, 엄문영 교수 “AI 시대 7대 핵심과제 추진”
거점국립대·지역 사립대·수도권 대학 총망라... 재정 혁신과 거버넌스 재구조화 한목소리
오현석 교수, 대학 혁명 성공 위한 ‘10가지 필수·충분조건’ 제시하며 정책 실효성 강조



8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POLICY SYMPOSIUM 2026: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급감과 AI 기술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한국 대학이 생존을 넘어 국가 개조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린 ‘POLICY SYMPOSIUM 2026: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고등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서열화라는 병목을 뚫어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던진 화두 = 제1발제를 맡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모든 고질적 병폐의 근원으로 ‘대학 서열화’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은 지위와 창조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병목사회’”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중국 대학들이 세계 100위권에 15개나 진입하는 동안 한국은 서울대 한 곳만이 턱걸이하고 있는 현실은 대학 혁명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상향 평등화를 제안했다.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격상시키는 ‘최소주의 전략’에서 시작해, 카이스트 10개, 교육중심대학 100개 등으로 확장하는 ‘최대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 정책이 단순한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하며, 서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명칭 공유와 체제 통합에 앞장서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AI 시대 대학 위기 극복방안: 7대 핵심 과제'를 주제로 AI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백두산 기자)

■ AI 시대의 생존 전략, 엄문영 교수 ‘7대 핵심 과제’ 발표 = 제2발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엄 교수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가 자동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고숙련 인재 양성과 장년층 재교육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며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엄 교수가 제시한 과제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거점대학(서울대 10개) 육성 △대학 거버넌스의 민주화 및 전문성 강화 △고등교육 재정의 OECD 수준 확충 △지역-대학-산업을 잇는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는 특히 “서울대 예산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생산적 투자”라며,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오현석 교수, ‘대학 혁명 성공 위한 10가지 조건’ 제시 =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책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오현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10가지 필수·충분조건’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오 교수가 제안한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정치적 의지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등교육 개혁을 밀어붙일 국가 수반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둘째, 법적 기반의 공고화다. 사업이 아닌 제도로써 안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파격적인 재정 확보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대학 공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넷째, 대학 서열화의 실질적 해체다.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닌 연구 역량의 실질적 분산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서울대의 자기희생적 리더십이다. 상징 자본을 지역과 공유하려는 서울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거점국립대의 자강 노력이다. 지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곱째, 지역 산업과의 강력한 클러스터링이다. 대학의 연구가 지역 일자리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덟째, 사립 대학과의 상생 방안이다. 국립대 중심의 개혁이 사립대 고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홉째, 국민적 합의와 지지다.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효능감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마지막 열째는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다. 국내 서열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연구 질적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정철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최해천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사진=백두산 기자)

■ “사업에서 제도로, 담론에서 실행으로”...2026년 대전환의 원년 삼아야 =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나 글로벌대학30 사업이 고등교육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사업’ 형태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철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학 세력이 스스로 정치화되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 혁명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특히 김종영 교수가 던진 ‘서울대 10개’라는 파격적 아젠다와 엄문영 교수가 설계한 ‘7대 과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오원석 교수의 ‘10계명’은 향후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교육 지옥’을 해체하고 ‘지식 강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두산 기자 102san@unn.net